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통상) 美 행정부,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개시 2
- 美 USTR은 중국·EU·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비관세 조치 및 추가 조사 확대 가능성 제기

📰 경제통상 동향

- (중동 상황) IEA, 중동 상황에 글로벌 석유시장 ‘사상 최대 공급 차질’ 언급 5
- (입법) 미 상원의원, 무역법 122조항 폐지 ‘무역 권한 회복법’ 발의 6
- (관세) 美 코스트코 회원, IEEPA 관세 환급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7

🏛️ 의회법안 동향

- 핵심광물, 관세 등 3건 8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

📅 워싱턴 D.C. 주요일정

3.12(목)	• 1월 미국 무역수지(U.S. trade deficit)
3.13(금)	• 2025년 4분기 GDP 잠정치(GDP (first revision))
3.16(월)	• 2월 산업 생산(Industrial production)
3.17(화)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통상) 美 행정부,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개시

1. 개요

- USTR,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능력·생산 관련 301조 조사 개시 발표(3.11)
 - 중국, EU,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능력·생산 관련 행위·정책·관행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 주요 교역국이 수요를 상회하는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과잉생산, 대규모·지속적 무역흑자, 미가동 설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
 - 구조적 과잉생산은 정부 개입에 따른 생산 확대와 내수 억제로 유지되며, 보조금, 국유·국영기업 비시장 활동, 시장 장벽, 금융·환율 관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
 - 일부 대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제한·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로, 결과에 따라 301조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가능
 - USTR는 조사 개시와 함께 16개 조사대상 경제권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공개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후속 절차 병행 추진 예정
 - 과잉생산 문제가 제기된 분야로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화학, 전자,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운송장비 등 다수 제조업 분야 제시
 - 금번 조사는 미국의 공급망 국내복귀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향후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가능성 시사

〈美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대상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능력·생산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 근거	무역법 301조 및 302(b)(1)(A)에 따른 USTR 직권 조사
조사 목적	미국 상거래 부담·제한 여부 및 301조 조치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주요 쟁점	과잉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유휴·미가동 설비 및 관련 정책 요인 점검
후속 절차	조사 대상 정부 협의 요청, 의견 수렴·공청회 진행 후 관세·비관세 조치 여부 검토

2. 상세

① 조사 배경

- 구조적 과잉생산으로 인한 제조업 국내회귀 및 일자리 창출 저해 평가
 - 구조적 과잉생산은 정부 개입과 정책 유인에 의해 유지·확대되는 성격이 강하며, 글로벌 제조업 생산 확대에도 평균 가동률이 75.0~75.9% 수준에 머물러 공급 초과가 지속된다고 분석

② 조사 대상 및 판단 기준

- 동 조사는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USTR은 각 정부에 협의 요청
 - * 조사 대상국: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 구조적 과잉생산의 판단 요소로 ▲대규모·지속적 무역흑자 ▲저활용·미가동 생산능력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지속 운영 등이 제시
 - 동 조사에서는 각 경제권의 행위·정책·관행의 미국 상거래 제한·부담 여부와 301조 상 조치 대상 해당 여부를 중점 판단할 예정

③ 중점 점검 분야 및 유발 요인

-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 문제 제기
 - *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공작기계, 기계류,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장비 등
 - 과잉생산 유발 요인으로 ▲보조금, ▲임금 억제, ▲국유·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시장접근 장벽, ▲보조금성 대출, ▲금융 및 환율 관행 등 명시

④ 향후 절차

- 조사 대상국 협의 요청 이후 의견수렴·공청회 등 후속 절차 진행 예정
 - 3.17.~4.15. 서면 의견서 및 공청회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5.5.~5.8.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반박 의견 제출 가능
 - 조사 결과 해당 국가의 행위·정책·관행 등이 301조 조치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대응 조치 검토 예정

⑤ 한국 관련 언급

- 전자장비, 자동차 부품, 기계류, 철강,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글로벌·대미 무역흑자 증가와 석유화학 부분 과잉 생산 능력 등을 조사 근거로 제시
- 한국의 글로벌 상품무역수지는 '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전환·확대되었고, 對美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4년 560억 달러 기록

3. 현지 반응

□ 현지, 금번 조사를 계기로 추가 301조 조사 및 후속 조치 확대 가능성 제기

- (NYT) 그리어 USTR 대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 여부를 점검하는 추가 301조 조사 개시를 예고했으며, 디지털무역, 의약품 가격, 쌀·수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 언급
-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7월 중 301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각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은 동 조사와 별개로 유지할 것임을 언급
- (USTR) 7월 중 301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각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은 동 조사와 별개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언급, 금번 조사로 교역국의 반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 제기
- (CNBC) 베선트 재무장관은 USTR·상무부의 추가 관세 검토가 마무리되면, 8월까지 미국 관세율이 대법원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
- (Hinrich) 301조는 다른 관세 권한에 비해 사법부·의회 제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 (WSJ) 301조 관세는 IEEPA 관세보다 법적 기반은 견고하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 이슈를 둘러싼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CBP(3.11), Hinrich(3.12), CNBC(3.11) NYT(3.11) 및 미 현지 언론 종합

(중동 상황) IEA, 중동 상황에 글로벌 석유시장 ‘사상 최대 공급 차질’ 언급

- (개요) 국제에너지기구(IEA), 중동 상황 영향으로 글로벌 석유 공급 차질 심화 평가
 - IEA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원유 운송과 생산이 차질을 빚으며 약 1,000만 배럴/일 규모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세계 석유 공급의 약 7.5%가 영향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 전례 없는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고 평가
 - 2026년 글로벌 석유 공급 증가 전망을 기존 240만 배럴/일에서 110만 배럴/일로 하향 조정하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지적
- (상세) 해상 운송 차질로 국제 유가 상승세…IEA 회원국 공동 비축유 방출 결정
 - 중동 지역 해상 운송 차질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위축되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약 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 IEA 회원국 32개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총 4억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정, 역대 최대 수준의 긴급 방출 조치로 평가
 - 일부 산유국은 대체 수출 경로 확보를 위해 파이프라인 및 항만 활용 확대 등 공급 대응 조치를 추진 중
- (반응) 에너지 가격 상승·인플레이션 우려 제기…미국 비축유 방출 계획 발표
 - 시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위험 확대 가능성 제기
 - 미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전략비축유(SPR) 1억7,200만 배럴 방출 계획 발표, 에너지 당국은 비축유 방출과 공급 다변화 조치로 단기 시장 불안 완화 가능성 전망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블룸버그(3.12), 파이낸셜 타임스 (3.12), 폴리τικο(3.11)

(입법) 미 상원의원, 무역법 122조항 폐지 ‘무역권한 회복법’ 발의

- (개요) 미 상원의원 13명, 무역법 122조 폐지를 위한 ‘무역권한 회복법’ 발의
 - 팀 케인(D-버지니아), 라파엘 워녹(D-조지아) 포함 민주당(12명)·무소속(1명) 상원의원, 무역법 122조*를 폐지하는 ‘**무역권한 회복법(Reclaim Trade Powers Act)**’ 공동 발의(3.11)
 - * 무역법 122조에 의거, 대통령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시 등 비상 상황에서 의회 승인 없이 모든 수입품에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 가능, 연장 시 의회 승인 필요
- (상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 종료 및 의회 무역 권한 회복 목적
 - 동 법안은 ① 122조 자체를 전면 삭제, ② 무역법 목차에서 122조 관련 항목 삭제, ③ 122를 언급하는 다른 조항(127(b)에서 해당 문구를 일치 수정(conforming amendment) 제안
 - 케인 상원의원은 ‘무역법 122조는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의 금 보유하고 소진으로 미국 달러 위기를 초래했던 당시를 전제로 한 비상조치로 지금은 무의미*하다’라고 설명
 - * 달러의 가치가 금(金)에 고정되어 외국 중앙은행이 금을 달러로 바꿀 수 있었던 고정환율제 하에 비상조치로 1974년 무역법 122조 제정, 이후 1976년 미국이 변동환율제로 전환
 - 동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의회의 헌법적 무역 권한을 계속 우회하고 있다’라고 언급
 - * 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전면 관세 10% 부과 발표(2.20)
 - 또한, ‘관세 비용 대부분은 미국 소비자·기업이 부담하며, 무역법 122조 관세가 가구당 1,000달러 이상의 비용(예일 예산 연구소의 추정치)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
 - (반응)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축소하고, 헌법상 무역 권한을 의회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해석, 민주당 상원 주도 발의 법안으로 당파적 논쟁 예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인사이드(3.11), 법안(링크)

(관세) 美 코스트코 회원, IEEPA 관세 환급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 (개요) 코스트코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관세 비용 환급 요구
 - 미 일리노이주 코스트코 회원 매튜 스토크프가 코스트코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기
 - 소비자도 관세로 인해 인상된 제품 가격에 대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 제기
- (상세) 유사 소비자 집단소송 증가, 소매업체는 환급액 계산 복잡성 강조
 -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가 관세로 인상된 제품 가격을 고객에게 환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약속은 할 수 없다고 주장
 - 코스트코 및 주요 소매업체들은 모든 관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식(공급업체 일부 비용 흡수 가격 조정 등)으로 대응, 환급액 산정이 복잡하다고 설명
 - 유사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 페덱스(FedEx), 유피에스(UPS) 등 다른 기업에도 제기된 상태
- (반응) IEEPA 관세 환급 시기 불확실, 소비자 환급 가능성 여부 불투명
 - 코스트코 CEO는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 환급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하며, 환급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나 향상된 가치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법적 실무적 복잡성으로 실제 소비자 환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
 - 현지 업체는 소비자 집단소송이 미 행정부에 환급 논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블룸버그 거버먼트(3.11), 월스트리트저널(3.11), 로이터 (3.11)

미국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핵심광물 (3.10)	S.4033 (상) (3.10)	Jon Husted (공)	<p>〈핵심광물 투자세제 현대화법(The Critical Minerals Investment Tax Modernization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년 국세청법(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하여 특정 희토류 생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미국 내 핵심광물 채굴을 확대하려는 법안
관세 (3.10)	S.4038 (상) (3.10)	Edward Markey (민)	<p>〈소기업 관세 면제 및 가격 폭리 방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관세로부터 해당하는 소기업을 면제하고, 그러한 관세가 부과된 상품에 대한 가격 폭리를 방지하는 법안
관세 (3.11)	S.4049 (상) (3.11)	Tim Kaine (민)	<p>〈1974년 무역법 제122조 국제수지 대응 권한 폐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4년 무역법 제122조 국제수지 대응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

* 미국 동부 시간 3월 12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u>Tesla's Grand Plan for the Future Is a Car With No Steering Wheel</u> (테슬라, 운전대 없는 미래차 구상 공개)</p> <p>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설계된 차량 '사이버캡 Cybercab'을 지난달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p>
The Washington Post	<p><u>White House considers waiving shipping rules in bid to ease energy prices</u> (백악관,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해운 규정 완화 검토)</p> <p>트럼프 행정부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미국 국내 항로는 미국 배만 운행해야 한다'는 존스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져</p>
The New York Times	<p><u>Trump Administration Live Updates: Homeland Security Funding Bill Fails in Senate as Standoff Continues</u> (미 국토안보부 예산 법안 상원 부결...교착 장기화)</p> <p>민주당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 없이는 국토안보부 예산 지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면서, 국토안보부 예산 관련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6표로 부결</p>
Bloomberg	<p><u>Man Killed After Ramming Car Through Doors of Michigan Synagogue</u> (미시간 유대교 회당에 돌진 후 총격 가해... 용의자 사망)</p> <p>디트로이트 교외의 한 유대교 회당 정문으로 차량을 돌진시킨 뒤 총격을 가한 남성이 보안 요원들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고 당국이 밝혔다</p>
Reuters	<p><u>Oil touches \$100 a barrel, shares skid after attacks on Gulf shipping, Iran warnings</u> (중동 사태 속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근접, 증시 하락)</p> <p>걸프 지역 선박 공격과 이란의 경고 속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가운데 증시는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했으며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p>

* 미국 동부 시간 3월 12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06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	2026.2월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	2025.12월
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5.12월
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출범	2025.12월
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2025.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6 (2026.2.6.)		
코인시-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